

## 농수산식품·K-Beauty 수출 확대 박차

양금희 경제부지사, 중동 유통 현장 직접 쟁기며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정부정상회의(WGS·World Governments Summit) 일정을 마친 뒤, 중동·북아프리카(MENA·Middle East & Northern Africa) 지역 최대 규모의 한국 식품·화장품 유통 기업인 1004 고메(1004 Gourmet, 대표 신동철 회장)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아프리카 시장 내 K-Food와 K-Beauty 산물의 현지 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도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4 고메(천사고메)는 두바이를 거점으로 5개의 자체 리테일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600여 개 이상의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 한국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MENA 지역 내 K-Food 확장을 선도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 부지사는 경상북도 농·수산물의 현지 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 축산, 친환경·스마트·동물복지로 전환!

사람과 반려동물 함께, 축산업 경쟁력 강화 4개 분야에 총 2,089억 투입



경상남도는 기후변화와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스마트 축산 전환과 친환경 축산 구현을 위해 올해 4개 분야 68개 사업에 총 2,089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축산 정책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축산물 가격 변동과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 문제를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축종별 맞춤형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 △젖소 능력 개량 △양돈 인공지능(AI) 변식 관리 시스템 구축 △밀산업 육성 △곤충산 업화지원 등 35개 사업에 236억 원을 투입한다.

고품질 생산 기반을 확장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축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장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 전기안전시설 보수지원 등 7개 사업에

최성룡 기자

## 부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 협약식

부산시는 10일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를 공식 선포했다. 협약식은 「2026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행사에는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 기관 ▲부산 소재 공공기관 ▲16개 구·군 ▲대학·금융기관 ▲지역 경제단체 ▲주요 지역 언론사 등 총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했다.

시는 수도권 업체 선호와 외부 여건 악화로 지역 기업의 판로가 위축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협약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술력 있는 지역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고, 공공부문이 미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이를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구매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단순 소모품 구매를 넘어 ▲지역 인재 채용 ▲건설 자재 ▲전문 용역 등 경제 활동 전반에 「부산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한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기업 거래 비중 확대 ▲구매 정보 투명 공유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 구체적 실천을 추진한다.

또한 ▲매월 구매 실적 점검 ▲우수 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환류 체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행사 현장에는 브노코리아를 비롯한 부산 지역 우수 기업과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총 20개의 홍보·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이용우 기자

## 대구시, 경증치매 '기억학교' 전면 개선 추진해

'통합돌봄법' 시행 선제 대응…예방적 인지재활 특화기관으로 재정립



대구광역시는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치매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이번 개선계획은 치매 초기 단계부터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억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예방 중심 치매돌봄 서비스로 전환·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먼저, 기억학교 명칭을 '기억돌봄학교'로 변경하고, 단순 주간보호 기능에서 벗어나 인지·정서·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예방적 인지재활 특화기관으로 재정립한다. 신체·인지·정서·사회·여가 등 5대 영역 표준 프로그램과 AI 기반 전자인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서비스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용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이 주 대상이었으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통합돌봄 판정 대상자 ▲65세 미만 초로기치매 환자까지 포함해 치매 초기 단계 돌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자는 주간보

호서비스와 기억돌봄학교 중 본인의 상태와 가정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조정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경우 돌봄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기간과 경과조치를 병행 적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약속한다.

주요 통합지원 분야는 ▲(금융) 외국 여권을 활용한 계좌 개설 및 유학생 금융상담 ▲(의료) 의료비 할인, 다국어 의사 상담 및 교육 ▲(취업) 인턴십 수요 및 취업 체험, 취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자) 유학생 지역 정주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통합지원 허브는 국민연금공단 부산시지부에 조성되며, ▲원스톱 상담 구역 ▲글로벌 라운지 ▲교육장 ▲운영 사무실로 구성된다.

이용우 기자

## 유학생 2만 2천명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 개소

부산시, 취업·의료·금융·비자 등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

부산시는 10일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 사옥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종합 지원하는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Study Busan Hub, 이하 통합지원 허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그간 대학별로 분산 추진돼 온 유학생 지원 사업을 아우르고, 시와 대학, 관계 기관이 함께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체계 전환」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다.

식전 행사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회의를 열어 주요 유학생 지원 사

업을 소개하고, 선배 유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부산 정착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통합지원 허브는 2025년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신라대학교와 동의과학대학교가 허브 운영 주관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지역혁신 기관인 부산 글로벌시제단이 참여해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개소식에서는 유학생 3만 명 시대를 대비한 원팀(One-Team) 부산 비전을 선포하고 실질적인 통합 지원을 위해 취업·의료·금융·비자 등 분야별 11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부산시와 부산라이즈 혁신원, 부산글로벌시제단, 주관대학(신라대·동의과학대)을 중심으로 ▲부산상공회의소·부산 경영자총협회(취업) ▲부산은행(금융) ▲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회통합) ▲동의의료원·동의대학교(의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 울주,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디지털기기 지원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사업 위수탁계약 체결…점포당 최대 300만원 지원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 환경 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

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폐쇄적 점포 환경 조성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지월 대상은 울주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력·매출 규모·임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4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점포는 공급가액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80% 지원 비율에서 올해 대폭 상향돼 소상공인의 자부담을 크게 줄였다. 지원 분야는 경영환경 개선과 디지털기기 지원 등 2개 분야다. 경영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노후 간판 교체,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

원해 고객 친화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돋는다.

디지털기기 지원 분야에서는 POS 기기, 스마트 오더 시스템, 서빙 로봇 등 디지털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해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월 대상은 울주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력·매출 규모·임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4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점포는 공급가액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80% 지원 비율에서 올해 대폭 상향돼 소상공인의 자부담을 크게 줄였다. 지원 분야는 경영환경 개선과 디지털기기 지원 등 2개 분야다. 경영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노후 간판 교체,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

## 116일간 산불 예방 총력 봄철 산불 '골든타임' 잡아라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 산불 위험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 영양군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강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영양군은 2026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16일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행정을 추진한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논·밭드렁 태우기와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입산통제구역과 통행 제한 등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대응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초동 진화 역량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고, 예방 중심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가 병행된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등을 신속히 파악해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소방서(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영양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활용한 신고 체계도 운영 중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행정의 대응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윤석 기자